

한국은 트럼프 ‘관세 폭탄’ 비난할 자격 없다

광화문·부

김 신 영

국제부장



가끔 해외 ‘직구’로 흥차를 주문해 마신다. 한국 소매점과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어쩔 수가 없다. 한 통에 4만 6000원 하는 프랑스 흥차를 직구로 사면 배송비 포함해도 1만원 이상 싸다. 가격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관세다. 흥차 수입할 때 붙는 관세가 40%에 달한다. 한국 농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반거로워도, 소량 구매라 관세가 면제되는 직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달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관세 전쟁’을 개시했다. 속도·강도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다. 경제학자들은 역사 속 수많은 사례를 들어 관세 전쟁이 미국과 교역국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은 종종 자유무역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로 거론된다.

그런데 ‘자유무역의 아이콘’ 한국의 관세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8.6%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한국을 뺀 나머지 나라의 평균은 1.9%에 불과하다. 조사 대상 190국 전체로 봐도 한국 관세율은 상위 30%쯤에 들어간다. 세네갈·탄자니아·모리셔스·마

다가스카르 등 저개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관세율은 장기간에 걸쳐 굳어졌다. 관세를 올리라는 농민 단체 등 생산자의 목소리는 큰 반면, 내리겠다고 ‘총대’ 때는 사람이 없어서 생긴 일이다. 정치적 결정이다 보니 경제적 상식과 어긋나는 경우도 많다. 흥차만 봐도 그렇다. 농자의 경쟁자(대체재)는 흥차보다는 커피일 테지만, 커피 관세는 0~2%로 매우 낮다. 경제 교과서에 무역 장벽의 폐해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 감소’다. 한국 음료 소비가 커피로 쏠리는 현상이 우연은 아니다.

자유무역으로 성장한 나라가 무역 정책은 정치 논리로 OECD 최고 수준인 한국 관세

트럼프 통상 공격 방어 될까

짧은 비합리적 관세의 대명사다. 쌀 농사짓는 농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특히 크다 보니 관세율이 약 500%에 달한다. 초고율 관세로 인한 무역 분쟁을 방지하려 한국 정부는 매년 쌀 40만톤을 매우 낮은 관세로 의무 수입하기로 WTO와 합의했다. 한국 생산량의 10% 정도 되고 가공용 쌀로만 가끔 풀리는데도(대부분은 창고에 쌓인다) 농민 단체는 이조차 없애라고 반발한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들의 ‘표’를 노리고 온갖 보조금을 얹어주는 악순환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많은 과일에

도 수십%씩 관세가 붙는다. 지난해 가격이 폭등해 소동이 일었던 사과 관세는 30%로 책정돼 있다. 이마저도 하나하나 얘기다. 검역을 이유로, 사과를 수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대 수입품인 원유에도 비상식적 관세가 붙는다. 기름 안 나니 나라들은 대부분 원유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원재료’를 싸게 들여와 가공해 쓰는데 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OECD 비(非)산유국 중 유일하게 원유에 관세(기본 세율 3%, 일부는 한시적 인하 중)를 부과해 왔다.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효성 없는 얘기다. 다른 선진국처럼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비율이 훨씬 커져, 한국의 세수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10%대에서 지난해 2%로 줄었다.

트럼프가 던지는 ‘관세 폭탄’ 의원칙 중 하나는 상호주의다. ‘너희가 때리는 만큼 때린다’는 얘기다. 트럼프가 지난 14일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많은 미국 매체가 한국을 관세를 높이는 나라의 예시로 거론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미(對美) 수입품 관세는 0.79%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보도 참고 자료를 냈다. 이런 논리가 먹힐까. 트럼프는 관세뿐 아니라 부과세·보조금·검역 등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고 있다. 기준은 맘대로 정할 것이다. 우리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한국의 무역 장벽을 트럼프가 이해해줄지 모르겠다.

우정아와 아트 스토리 [570]

얼굴을 씻으세요

미국 예술가 벤저민 패터슨(Benjamin Patterson·1934~2016)이 만든 작은 플라스틱 상자에는 래몬 모양 비누와 ‘얼굴을 씻으세요’라고 적힌 종이 수건이 담겨 있다. 패터슨은 이 상자 여러 개를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구매자가 누구든 ‘지시문 2번’을 따라 비누와 수건으로 얼굴을 씻으면 공원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연 세수가 예술이란 말인가.

패터슨은 미시간 대학에서 더블베이 스를 전공했지만, 스무 차례 이상 오디오선에 응했어도 그를 고용해 주는 오케스트라는 미국에 없었다. 실력 탓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부분은 오디오선에 나타난 그의 얼굴만 보고 ‘문제가 있다’

고 돌려 세웠다. 때는 1950년대 초, 미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이었고, 패터슨은 흑인이었다. 검은 피부색이 밝아질 때까지 얼굴을 씻었다면 되는 거였을까.

미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처음으로 피부색의 장벽을 허물겠다고 다짐했던 패터슨은 전자음악에 빠져들었고, 1960년에 전자음악을 선도하던 서독에서 존 케이지와 백남준을 만났다. 연주자가 침묵하는 4분 33초 동안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음이 음악이라고 주장했던 케이지와 바이올린을 켜는 게 아니라 부수는 소리도 음악이라는 백남준의 세계에서 어떤 이유론든 예술가가 되지 못할 사람, 예술이 될 수 없는



벤저민 패터슨, 지시문 2번(얼굴을 씻으세요), 1964년, 10×12×1.5cm, 미니에폴리스 워커 아트센터 소장.

작품은 없었다.

몇 년 전 미국 한 미술관 강당에서 ‘지시문 2번’의 공연을 봤다. 물이 잘 람다는 대야를 하나씩 들고 무대에 오른 네 명의 퍼포머가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 정성스레 얼굴을 씻었다. 지금도 세수를 하다 문득 그 공연이 떠오르면 피부에 닿는 물의 온도와 비누 향기, 거품의 촉감, 그리고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물방울 소리가 갑자기 예술처럼 느껴진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세금 아닌 징벌, 상속세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고, 기업 상속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를 들고나왔다.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일괄 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18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상속세 면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는 정부와 국민의 위협 방안에는 ‘초보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징벌에 가깝게 변질됐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50평형이 5억원이던 시절에 공제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을 그대로 두었으니 당시엔 소수 부유층이 내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도 내야 하게 됐다.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겨냥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심을 쓰는 듯하지만 미국은 2024년 기준 1292

만달러(약 184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것 못지않게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기업 경영권 상속세 문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둘째로 높지만 기업 최대 주주에게는 할증까지 붙여 실제 최고 세율이 60%까지 올라간다. 최대 주주에게 할증까지 붙이는 건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다. 두 세대에 걸쳐 기업을 승계한다면 기업이 사실상 국유화될 수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대주주가 세금 내려고 회사를 팔아야 한다면 그 세금 액수보다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클 것이다. 그 기업이 문제없이 경영을 계속해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민 전체에게 더 이익이다. 나중에 대주주가 기업 경영권을 매도한다면 그때 세금을 물려도 결코 늦지 않다.

일본의 경우, 상속세율이 명목상 55%로 높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파격적인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징벌적 상속세를 OECD 국가들 기준에 맞게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주는 선물과 별로 전략한 국회 입법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현재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없애면서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처럼 63세 정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수처 검사 정원도 지금의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및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안은 최근에 제출됐고 법안 내용 역시 그동안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주도했다. 수사 초기에 압수 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쇼핑’의 위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작년까지 4년 동안 예산 813억원을

쓰고도 직접 기소한 사건은 단 4건에 머물렀다. 그랬던 공수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에 무리하게 나서며 수사보다 정치에 가까운 행동을 하자, 민주당이 공수처의 숙원 사업을 입법과 예산으로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작 공수처가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입법 과제들은 방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는 입법이나 예산 감액,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으로 보복해 왔다. 검찰 수사와 정보 활동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 업무경비 50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의 특활·특경비 60억원도 모두 삭감됐고, 법무부 예산도 487억원 깎였다.

반면 공수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억원 증가한 252억원을 편성했다. 법원의 숙원 사업이던 판사 임용 범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도 발의 한 달 만에 처리됐다. 판사 정원도 올해부터 5년간 370명 늘어난다.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물 공세다. 국회의 입법권이 민주당에 잘 보인 측에 선물을 주고, 밀보인 측에는 벌을 주는 수단으로 전략했다.

‘용적률 매매’ 실험, 서울도 도쿄나 뉴욕처럼

서울시가 미국·일본처럼 건물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 이양제’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고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높이 올리지 못한 경우 못 쓴 그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정 용적률을 못 채운 건물주는 규제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추가 용적률을 받는 지역은 그만큼 더 높이 지을 수 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뉴욕·도쿄 등은 이 제도를 활용해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바꿨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원 맨다빌드 빌딩이 대표적이다. 일본도 도쿄역 근처 6개 빌딩과 도쿄역이 용적률 매대로 고층화와 역사(驛舎) 복원을 동시에 이뤘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글로벌 대도시들은 넓고 비효율적인 도시를 업그레이드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도쿄는 지난 2002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만든 이후 발 빠른 규제 혁파를 통해

도심 곳곳을 특구로 정하고 인프라 일체형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도시 경쟁력 평가인 ‘글로벌 파워시티 인덱스’에서 지난 10년새 도쿄는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서울은 낡은 규제에 묶여 도시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사대문 안 상업 지역 용적률은 800%, 신축 건물 높이는 90m로 제한되는 등 온갖 규제가 점철산중으로 가로막고 있다. 문화재 100m 이내 건물은 담장에서 27도로 그늘 사선 높이를 넘을 수 없다는 ‘문화재 양각(仰角)’ 규제라는 것까지 있다. 박원순 시장이 이런 규제를 이용해 도시 개발을 막아왔다. 이래선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이길 도리가 없다.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이 성장하기 위해선 수직 개발을 통해 기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용적률·고도 상한이나 용도 제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20여 개의 심의 제도 등 비효율적 규제를 과감히 풀어 도시를 고밀도 복합 개발해 야 집값도 잡고 도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조기대선·개헌》간보기에만 몰두

권영세·권성동 따워론 안돼 ... 《중도타령》한동훈·오세훈·유승민·안철수 부류로도

기회주의 국힘 지도부, 투쟁 대신 딴 생각만
기회주의 언론, 부채질과 부화뇌동
《가짜 보수-가짜 중도》가라!
3.1절 총결기로 주류세력 교체하자!

저항·투쟁 대신 눈치작전

3.1절 총결기를 계기로 《한국 자유·우파 주류세력》을 확보할 때가 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킬 《주류 정치세력·주류 사회세력》을 이제 과감히 바꿔야 한다.

결론부터 앞세우자. 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따워론 안 된다. 한동훈계 《탄핵 찬성파》론 안 된다. 조기 대선 간보는



오세훈·유승민·안철수 부류로도 안 된다. 이들을 앞세우는 《기회주의 기득권 집단》으로 안 된다. 이들은 누군가?

박근혜 탄핵 변절·배신자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윤석열 대통령마저 밀어내려는 계보다. 이들은 《개혁 보수/중도 통합》을 내세운다. 실제로 그대그대의 《개혁》자에게 얻어지지 않으려 영거주술, 《카멜레온 짓》을 하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역대 수혜층이다. 그러면서도 역대 권력에 한 번도 치열하게 맞붙어 본 적이 없다. 적당히 비판적인 척할 때도, 결코 수위를 넘진 않는다. 겁 많고 지킬 게 많기 때문이다.

오늘의 좌익 시대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산다. 그들은 좌익 권세에 정면으로 대들지 않는다. 적당히 숙이고, 적당히 타협한다. 이걸 스스로 《중도》라 분식(粉飾)한다. 《성현들의 중도》가 그런 암암한 기회주의였던가?

그래서 그들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 《윤석열 밀어내기》에도 앞장섰다. 이래야 좌파 대세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탄산했기에.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야차》하고 있다. 왜? 뭘 일 있었나?

자유시민들 각성, 폭발!

뭘 일 있었다. 그들의 알팍한 꿈수가 더는 먹이지 않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좌익 + 기회주의자》들의 가짜 뉴스와 선동질이 대중에게 팽파 뿔었다. 좌익뿐 아니라 상당수 중간층 시민들도 《충분 광란》에 휩쓸렸다.

그러나 오늘의 사정은 그때와 180도 달라졌다. 광화문 여의도·강남·대천·대구·부산·광주에서 수십만 자유인들이 《좌익+기회주의》 정파 언론의 선동》을 박차고 《자유대한민국-윤석열 대통령 수호》를 외치며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전 국민·2030·대학생들·생활인들·수도권·영남·호남·충청

·강원인들이 오랜 악령의 주술에서 깨어나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인이다!” 외치고 나섰다. 몽매(蒙昧)에서 깨어난 《종교개혁-르네상스-계몽사상-근대의식-개인의 발견-자유-인권-법치-시장》의 거창한 지진이 쓰나미였다.

이제, 《비폭력 국민저항 운동》이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저들 《자유의 적(敵)》의 민낯이 환하게 드러나 보였다.
※ 극과 전체주의 일당독재 + 북-중-러 유라시아 전체주의
※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득만 챙기는 전철후 기회주의의 정파-언론

이래서 오늘의 스타, 자유인들의 《비폭력 국민 저항 운동》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 부흥의 새로운 주류로 찬란하게 떠올랐다. 가짜 보수-가짜 중도는 가라! 이제는 《진짜》의 시대다. 《진짜》들은 외친다.

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탄핵 기각! 직무 복귀!
② 《조기 대선-윤 대통령 사과-임기 단축 개헌》운운 박살!
③ 좌익 카르텔 청산! 기회주의 배신 척결!
④ 자유-보수-우파 주류세력 교체!

우리 승리하리라!

1류 근 일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2월 24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33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